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4. 24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황국주 의원 등 10명(도하석, 장호섭, 고명옥, 김정희, 박정환, 강한곤, 권숙자, 남현주, 박왕규)
- 발의일자: 2025. 4. 9.(수)
- 회부일자: 2025. 4. 9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(2025. 4. 24.)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, 교육훈련·포상 등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사기를 진작하고, 업무 효율성을 높여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임용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및 제2조)
-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 등 직무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직무수행의 제한 및 근무실적평가 (안 제5조 및 제6조)
- 비밀엄수, 교육훈련 및 포상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제47조~제52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,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4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이용재)

- 이 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임용, 배치, 근무 기간, 직무 범위, 직무수행의 제한 등 정책지원관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1항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은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은 정책지원관을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 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.
-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부터 정책지원관을 임용·운영하고 있는 달서구의회의를 상황을 반영하여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¹⁾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,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1) 2025년 4월 현재 6개 광역의회와 43개 기초의회에서 “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”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 대구광역시에서는 남구·북구·수성구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